



KOTRA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화/목) 배포합니다.



▣ 주요 내용

⌚ 워싱턴 D.C. 포커스

- (핵심광물) 美 의회의 '미국 핵심광물 공급 확보법' 입법 추진 동향 2
- 핵심 에너지 자원 정의를 법제화하고, 공급망 평가·관리·안보 관련 에너지부 권한 강화

₩ 경제통상 동향

- (규제) 美 행정부, 연방 온실가스 규제의 법적 근거인 '위해성 판단' 철회 추진 4
- (통상) 미국-인도, '상호주의 기반 예비 무역합의' 도출...디지털·공급망 협력 강화 5
- (미중관계) 미·중 정상, 4월 초 베이징 정상회담 예정 6

⚖️ 의회법안 동향

- 의약품, 핵심광물, 관세 등 총 7건 7

💬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8
-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9

📅 워싱턴 D.C. 주요일정

2.11(수)	• 1월 미국 고용보고서 (U.S. employment report)
2.12(목)	• 2월 1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Initial jobless claims)
2.13(금)	• 1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Core CPI)
2.16(월)	• 연방 공휴일(President's Day)

(핵심광물) 美 의회의 ‘미국 핵심광물 공급 확보법’ 입법 추진 동향

1. 개요

- 미 하원, 미국 핵심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한 ‘미국 핵심광물 공급 확보법’ (Securing America’s Critical Minerals Supply Act, H.R.3617) 입법 추진
 - 미 에너지부 조직법 개정을 통한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목적
 -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및 관련 소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에너지부 조직법을 개정*하여 관련 임무와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
 - * 에너지부의 책임과 권한은 대폭 확대되었으나, 석유 공급 부족 문제에 초점을 둔 1977년 에너지부 조직법(Department of Energy Organization Act)은 현실 미반영
 - 동 법안은 에너지부가 미국 내 핵심 에너지 자원의 공급을 보장하고, 공급망 혼란이 에너지 기술과 시스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도록 지시
 - ’25년 5월 존 제임스(공화당, 미시간) 하원의원이 최초 발의→’26년 2월 9일, 미 하원, 하원 본회의 상정을 위한 토론 규칙에 합의

2. 주요 내용

- ‘핵심 에너지 자원(Critical Energy Resource)’의 정의를 법제화하고, 공급망 평가·관리·안보에 대한 에너지부 권한 강화
 - 핵심 에너지 자원을 ‘미국 에너지 시스템에 필수적이며 공급망이 취약한 모든 자원’으로 명시*, 광물·소재·에너지 공급망 전반의 에너지 안보 강조
 - * 특정 광물 리스트를 열거하지 않고 광물, 금속뿐 아니라 에너지 소재·공정상 필수 소재 포함 에너지 기술·시스템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수적인 모든 자원을 포함

“The term ‘critical energy resource’ means any energy resource

(1) that is essential to the energy sector and energy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and (2) the supply chain of which is vulnerable to disruption.”

(DOE Organization Act §2(d), H.R. 3617 개정안)

- 미국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신뢰 가능한 공급 확보를 에너지부의 공식 임무로 명시하고 에너지부의 기능 확대
 - 동 법안은 에너지부가 미국의 핵심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상시 평가 수행 및 연방기관, 주정부, 에너지 업계 대표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도록 지시
 - 에너지부가 ① 에너지 자원 중요도 ② 미국 공급망·취약성 분석, ③ 미국 공급망의 다양성·독점 위험 ④ 생산 능력 제약 요인, ⑤ 생산·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 규제, ⑥ 수입 의존도가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 ⑦ 적대국의 시장 조작, 반경쟁 행위, 인권 문제 등 평가를 수행하도록 명시
 - 또한 △핵심 에너지 자원의 공급원 다양화, △국내 생산·분리·정제 역량 확대, △대체 소재·기술 개발, △재활용·재사용 기술 개선 전략을 마련하도록 지시
- 법 시행 후 2년 이내, 에너지부는 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규제·지침·조치 등을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및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에 보고

□ 시사점

- 미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광물 정책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광물 공급망 법안을 추진 중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전략 가속화 전망
 - 트럼프 행정부는 120억 달러 규모의 핵심 광물 비축 발표, 동맹국들과 핵심광물 협정 체결, 미국 민간기업 투자 확대 등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강화 전략 본격화
 - 미 의회는 미국의 광물 자립·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광물 지배법*(Critical Mineral Dominance Act) 상원 계류,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강화를 위한 초당적 광물 확보법(SECURE Minerals Act) 발의(1.15) 등 광물 공급망 관련 입법을 추진 중
- * 중국 핵심광물 공급망 의존도 축소·미국·동맹국 중심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하는 법안 인허가 간소화·국내 생산 지원·전략비축 확대·위험국가 통제 등 미국의 광물 자립·안보 강화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문현주
▪ 자료원	H.R. 3617(링크), 블룸버그 Government(2.9)

(규제) 美 행정부, 연방 온실가스 규제의 법적 근거인 '위해성 판단' 철회 추진

- (개요) 미 환경보호청(EPA), 연방 온실가스 규제 체계 전반의 구조적 재편 예고
 -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차원의 온실가스 규제의 법적 근거인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철회를 위한 최종 규칙을 이번 주 공개할 예정
 - * EPA가 특정 물질이 공중보건·복지에 위해를 준다고 판단해 규제 권한을 성립시키는 법적 판단
 - 해당 판단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채택돼 자동차·트럭 배출 기준 등 연방 온실가스 규제의 법적 근간이자 Clean Air Act에 근거한 EPA 규제 권한의 핵심 근거로 작용
- (상세) 자동차·운송 중심으로 적용, 향후 발전·에너지 부문 파급 가능성 전망
 - EPA는 자동차 부문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측정·보고·인증·준수 의무, △관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및 크레딧 제도, △산업계 보고 의무를 전면 폐지할 계획
 - 행정부는 이번 조치로 △총 규제 비용 1조 달러 이상 절감, △차량당 평균 2,400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나, 세부 산출 근거는 공개하지 않음.
 - 발전소·정유·가스 등 고정 배출원 규제에는 즉각 적용되지 않으나, '위해성 판단'이 철회될 경우 해당 규제의 법적 기반이 장기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됨.
- (반응) 연방 규제 공백 가능성에 따른 주 정부 대응 강화 및 기업 불확실성 증대
 - 현지 언론은 연방 규제가 철회될 경우, 캘리포니아·뉴욕·매사추세츠 등 민주당 주도 주 정부가 독자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
 - 특히 캘리포니아는 온실가스가 연방 규제 대상이 아닐 경우, EPA 승인 없이도 차량 배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해당 입장을 재확인
 -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내 규제 완화와 EU 등 해외 시장의 강화된 환경 기준 간 차이로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 및 법적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우려 제기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정연호
▪ 자료원	월스트리트저널(2.9), 블룸버그(2.9)

(통상) 미국-인도, ‘상호주의 기반 예비 무역합의’ 도출…디지털·공급망 협력 강화

- (개요) 미국과 인도는 상호주의에 기반한 예비 무역합의를 발표하고, 향후 포괄적 양자무역협정(B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합의
 -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최근 통화를 통해 합의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양국은 시장개방 확대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합의 (백악관 팩트시트, 2.9일)
 - 미국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약속을 인정해 대인도 수입품 추가 25% 관세를 철회하고, 기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8%로 인하
 - 인도는 미국의 산업재·농산물(곡물, 견과류, 콩기름, 주류 등)에 대한 관세 인하·철폐와 함께 향후 5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
- (상세) 디지털·비관세 분야 협력 추진, 단계적 양자무역협정 로드맵 착수
 - 인도는 디지털 서비스 세 철폐를 약속하고, 전자상거래·데이터 이동 관련 차별적 조치 금지 원칙을 포함한 양자 디지털무역규범 협상 개시 합의
 - 양측은 공급망·기술협력, 비시장경제국 대응 등 경제안보 협력을 추진, 향후 비관세장벽, 기술규제, 조달, 지재권, 투자, 노동, 환경 등 19개 분야 세부 협의를 진행할 예정
- (반응) 현지, 디지털조항·노동규범 누락 지적…‘중간단계 합의’ 평가
 - 폴리티코 등 현지 언론은 전자상거래 관세(디지털 관세) 영구 금지에 대한 인도의 확답이 없었다는 점을 최대 쟁점으로 지적
 - * 인도는 WTO 내에서 상설 유예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으며, 이번 합의문에도 미포함
 - ** 최근 체결한 아르헨티나·말레이시아 등의 상호무역협정과 달라, 불완전한 중간단계 성격이라는 평가 다수
 - 또한 노동·환경 관련 인도의 구체적 약속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특징적으로 지적되며, 인도는 전통적으로 해당 사안을 통상협정에 연계하는 데 부정적 입장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백악관(2.9), 폴리티코(2.10)

(미중관계) 미·중 정상, 4월 초 베이징 정상회담 예정

- (개요) 미·중 정상, 4월 초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사전 조율 진행

-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첫째 주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백악관의 공식 발표를 앞둔 상황

- 양국 정상은 지난주 유선으로 무역 및 외교 협상을 사전 점검하고, 정상회담 의제 및 일정에 대한 조율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짐

- (상세) 미·중 정상 간 통화에서 대만 문제 등 주요 현안 논의

- 지난해 10월 한국 회담 당시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던 대만 문제가 이번 정상 간 통화에서 언급되며, 향후 양국 협의 과정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

-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이후 미·중 관계에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한적인 완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중 의존도 축소 기조 속 구조적 불확실성 상존

- 이번 베이징 회담은 연내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첫 일정으로, 향후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 가능성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회의 계기 추가 회담 가능성이 거론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James Lee
-------	------------------------

▪ 자료원	폴리티코 (2.9), 로이터 (2.9)
-------	---

주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자동차 (2.5)	H.R.7389 (하) (2.5)	Brett Guthrie (공)	<p>〈2026년 자동차 현대화법(Motor Vehicle Modernization Act of 20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 체계를 전면 개편해 자동화 차량(ADS 탑재 차량) 등 신차 기술에 맞는 안전 규제·감독 권한과 절차를 대폭 정비하는 법안
	H.R.7390 (하) (2.5)	Robert Latta (공)	<p>〈2026년 자율주행차법(SELF DRIVE Act of 20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법전 제49편을 개정해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의 자동운전시스템(ADS) 차량 규제·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안전조치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의약품 (2.5)	S.3788 (상) (2.5)	Rick Scott (공)	<p>〈의약품 원산지 투명성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 개정을 통해 의약품 라벨에 원료 구성 및 공급망 관련 정보(활성 성분의 생산·조립 위치 등)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
	S.3794 (상) (2.5)	Jim Banks (공)	<p>〈조제 약국 및 아웃소싱 시설 규제 강화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을 개정해 조제 약국(Compounding Pharmacies) 및 아웃소싱 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핵심광물 (2.9)	H.R.3617 (하) (‘25.5.29)	John James (공)	<p>〈미국 핵심광물 공급 안정화법(Securing America's Critical Minerals Supply Ac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부 조직법을 개정해, 미국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인 희소 광물 등 핵심 에너지 자원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법안
H1B 비자 (2.9)	H.R.7373 (하) (2.9)	Gregory Steube (공)	<p>〈착취적 수입노동 면제 종료법(Ending Exploitative Imported Labor Exemptions—EXILE Ac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법안은 현행 H-1B 비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정 국적 및 연령대 중심의 인력 활용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배경으로 제안
관세 (2.0)	S.3808 (상) (2.9)	Katie Britt (공)	<p>〈관세 사기 처벌 강화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30년 관세법을 개정해 관세 사기 행위에 대한 민사 벌금을 인상하고 집행을 강화하는 법안

* 미국 동부 시간 2월 10일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p>Saks to Close Nine Department Stores in Initial Bankruptcy Review (경영난에 허덕이는 삭스 글로벌...결국 9개 점포 폐쇄)</p> <p>삭스 피프스 애비뉴, 니만 마커스, 버그도프 굿맨 등 고급 백화점을 운영하는 삭스 글로벌은 최근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며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결국 삭스 피프스 8개, SWLAKS 마커스 1개 점포를 폐쇄하겠다고 밝혀</p>
The Washington Post	<p>5 takeaways from the Republican-led hearing on ICE (공화당 주도 ICE 청문회 주요 내용)</p> <p>로드니 스콧 CPT 국장, 조셉 에들로 이민국 국장,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직무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ICE 청문회에서 일부 공화당원은 ICE 단속이 주요도시보다는 국경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 국토안보부 자금이 금요일에 만료됨에 따라 단속 작전의 부분적 셧다운도 전망돼</p>
The New York Times	<p>Top immigration officials refuse to discuss fatal shootings in Minnesota with lawmakers (고위 이민당국자, 미네소타 총격사건에 입다물어)</p> <p>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직무대행 등 고위 이민당국자는 금일 청문회에서 미네소타 총격사건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자 사과하거나 동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혀</p>
CNN	<p>The US slips to its lowest-ever rank in a global corruption index (부패한 미국?...역대 최악의 부패 지수 기록해)</p> <p>미국의 글로벌 부패지수는 182개 국가 중 29위로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하며 2012년 이후 최악을 기록해. 전문가들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 등이 반부패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혀</p>
USA Today	<p>What Donald Trump said about Bad Bunny's Super Bowl halftime show set (배드 버니 하프타임 쇼에 대한 트럼프의 평가는?)</p> <p>대부분의 곡을 스페인어로 부르고, 중남미 국가들을 언급한 후 “증오보다 더 강력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언급한 배드 버니의 하프타임 공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해</p>

* 미국 동부 시간 2월 10일 16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6-05	트럼프 정부의 IEEPA 관세 대안으로 수입 면허제 활용 가능성 검토	2026.2월
US26-04	트럼프 행정부 출범 1주년 경제·통상 성과 및 현지 평가	2026.2월
US26-03	2026년 주요 통상 일정과 미국 통상정책 환경 변화 전망	2026.1월
US26-02	유엔과 세계은행이 전망한 2026년 세계 경제 및 정책 제언	2026.1월
US26-01	2026년 글로벌 핵심 리스크와 미국 정책 환경 변화 전망	2026.1월
US25-51	골드만삭스 2026년 세계경제 전망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50	美 2026 국방수권법(NDAA)로 살펴본 미국 국방정책 방향	2025.12월
US25-49	미·중 경제안보 검토 위원회(USCC) 의회 연례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48	워싱턴 국제무역협회 'Trade & Tech Summit'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47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둘러싼 미국의 인식 전환과 통상 질서 변화	2025.12월
US25-46	2026년 USMCA 공동재검토 주요 일정 및 3국 입장과 현지 평가	2025.12월
US25-45	2025년 백악관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특이점과 경제무역 합의	2025.12월
US25-44	美-中 반도체 디커플링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2025.12월
US25-43	트럼프 정부, 미국형 소버린 AI 구축을 위한 『제네시스 미션』 출범	2025.12월
US25-42	美 연방 대법원 IEEPA 관세 재판 동향 및 트럼프 관세 플랜 B 전망	2025.11월
US25-41	美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및 예산 합의 관련 주요 동향	2025.11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 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사-26 (2026.2.6.)	 경제지 3사 워싱턴 특파원을 만나보았습니다!	
코인사-25 (2026.1.24.)	 미국 수입 통관 101 관세정책부터 주요 사례까지	

문의	이메일	전화
	jwshim@kotra.or.kr	+1) 202-857-7919
	shim.nature@kotra.or.kr	